

“현대제철의 정규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 승소

원·하청 섞여서 일하지 않아도 파견 근로 폭넓게 인정 전향적 판결 ‘철강업계 첫 사례’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수차례 있었지만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인사계·근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내하청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업

체들이 독립적 조직·설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은 각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주목할 점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파견근로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원청과 동일한 일을 한 기계·전기정비나 물류운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물론, 원청에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작업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시했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생산 구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공장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모두 원청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 조합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후 최근까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에서 불법파견 인정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2011년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홍주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현대제철 판결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회는 현대제철 사업장 안의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를 조직해 집단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사 성격의 사업장에서도 줄소송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회사가 법원판결을 존중해 순천공장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길 요구하며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도 올해 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해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법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인정 **연합뉴스 2.19**
-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철강업계 첫 사례 **한국일보 2.19**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현대제철 정규직과 같다. **CBS 2.18**
- 현대제철 161명 불법파견 인정 유사소송 잇따를 듯 **매일노동뉴스 2.22**
-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사측 사과 정규직화 요구 **경향신문 2.1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정규직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저희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5년여 소송 끝에 2016년 2월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닌 현대제철의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 민들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역 상담 062-453-4012
 금속노조 광전 순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010-9217-3763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010-8604-5533

금속노조 충남지역 상담 041-549-4344
 금속노조 충남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010-3622-5325

금속노조 인천지역 상담 032-525-0497
 금속노조 포항지역 상담 064-278-1339

메탄올 사용업체 제보하세요

휴대폰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일제 점검 이후 메탄올 사용이 줄어들긴 커녕, ‘공업용 알코올’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메탄올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납품사들의 안일한 태도와 ‘수박 겉핥기식’의 고용노동부 조사가 초래한 결과다. 계속되는 메탄올 중독 사고 중단을 위해 제조업에 만연한 마구잡이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삼성전자, LG 전자 등 핸드폰을 만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과 메탄올 사용 사업장 집중선전전을 시작으로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 남동공단 전자부품 회사
메탄올 중독
실명 뇌손상 속출**

메탄올 사용업체 제보하세요

메탄올 중독 증상: 심한 두통, 구역질, 불음, 현기증, 수면/소화장애, 눈/피부 자극

제보 방법 메탄올을 사용하는 회사, 사용공정을 알려주세요.
 메탄올을 사용하는 용기(원래용/덜어쓰는 등) 사진을 보내주세요.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032-525-0497 **관리찾기119**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리/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4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 3면 업체 폐업, 이렇게 대응하자
- 6면 이주칼럼 / 노동안전칼럼
- 4면 <단결론>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 세상 속으로
- 7면 노동자의 알 권리
- 5면 공단임금실태조사
- 8면 지금 공단에서는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입니다

1988년 7월2일 온도계를 만드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15세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소년 노동자의 이름이 '문송면' 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문송면의 충격적인 죽음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자본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죽는다는 걸 사회적으로 폭로한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천에 나서고 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노동자는 건강한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위험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노동현장은 작업장이 아니라 인간 도살장이다. 수 많은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죽고, 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서 죽고, 제품에 맞아 죽는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더 이상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작업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건강권 쟁취 투쟁!



파견노동 차별철폐, ‘권리찾기’에서 시작해 ‘파견노동 철폐’로 나아가다

지난 3월16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조업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업보고대회’에 당사자인 파견노동자들과 공단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경기금속지역지회,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석민 파견탈출프로젝트 팀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처음엔 있는 파견법이라도 잘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파견차별금지와 파견법 준수 투쟁에 집중했다”며 “3년간 투쟁을 진행해보니 파견제도야말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밝혔다.



파견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파견노동자의 토크쇼에서는 파견노동의 애환을 담았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성희롱을 참고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하루 아침에 200명이 잘려나가도 아무런 저항도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까지 강요하는 회사의 꼼수도 고발했다. 파견노동자들은 이중착취, 고용불안, 임금차별, 무권리와 체념이 뒤범벅 된 파견노동의 현실을 폭로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인간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어느새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활동을 통해 파견노동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불법파견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과 전국에 이슈화시켰다. 실태조사와 여론작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역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제조업 뿌리산업까지 ‘파견 허용’이라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조업 파견 전면 허용을 의미한다. 반월시화공단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은 파견노동 확대가 노동자 대부분의 고용불안 심화, 임금저하, 무권리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파견확대 정책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파견확대 정책 막아야

또한, 파견노동자 네트워크 등 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 상시적인 불법파견 신고/상담 센터 개설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알선(직업소개) 사업을 통해 불법파견 신고/상담센터도 개설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알선을 통해 불법파견업체가 선점한 일자리 알선사업을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참가자들은 “파견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런 파견노동자들의 애환과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반월시화공단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정현철 / 경기금속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위기의 조선소 업체폐업, 임금체불 '직접행동' 이 대안이다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에서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임금 떼먹고 도망가는 사장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양심 없는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청사 하청단가 후려치기도 한 몫하고 있다. 최근 들어오는 상담 대부분이 임금체불에 관련한 상담이다.

옛그제는 업체사장이 야밤에 도주했다고 상담이 들어왔다. 오늘은 업체사장이 원청에서 계약조건까지 무시하고 하청단가의 80%를 삭감한 기성 내역서를 들고 왔다고 하소연을 늘어났다. 사장이 도망가거나 하청단가를 후려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가장 곤란한 사람은 우리 노동자들이다.

업체사장도 죽을 맛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사장이 자살한 일도 있었다. 문제는 이럴 때 현행법이나 노동법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업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하고 노동자들은 겨우 채당

금 신청정도를 할 뿐이다.

실상 쓸모없는 법이지만 이용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써 먹고, 지금 당장은 임금(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선 작업 중인 블록을 접거하거나 반출을 막는 행동을 취하고 동시에 원청사에 기성금, 공탁금 등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일꾼들이 적절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면 작업장이나 작업물을 담보로 댓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는 늘 있었다. 새로운 것도 아니

다. 법적 절차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압류를 신청한다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 등을 해야한다.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일단 법적 절차를 추진하되 동시에 '직접행동'을 시작해야한다. 가령 블록접거 등을 통해 미지급된 기성금, 도급 계약시 공탁한 보증금 등을 임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요구



해야한다.

공장 정문 노숙농성도 효과적이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지역사회 여론의 압박 등에 회사가 눈치보며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시측은 경찰을 부른다며 협박하는데 굴하지 말고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 임금을 두 세달치 밀려 '집구석에 쌀이 없는데 뭘 짓인들 못할까'는 마음으로 독하게 행동해야한

다.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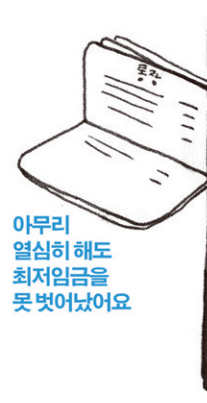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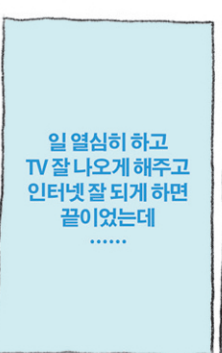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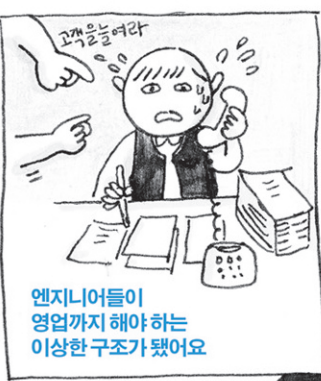
전해 듣기론 거제, 통영지역 노동지청들이 체당급 신청건수, 체불임금진정 고소건 등 민원접수량이 전국에서 1등을 다룬다고 한다. 노동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는 세금만 약차같이 받아 챙기는 국가의 모든 기구들이 노동자보다 자본가, 사장님들을 살뜰히 챙겨온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일으키는 불온한 세력은 다음 아닌 체불임금을 만드는 사장님과 그를 수수방관하는 국가다.

최근 삼성중공업 사외업체가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2억이 넘는 체불금액을 안게 됐다. 임금체불의 위기 앞에서 정문농성 등 직접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많은 체불임금 민원 중에 직접행동을 나서는 경우 한 건의 예외 없이 모두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직접행동을 권하는 이유다.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진행하는 공단 임금실태조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봄 별 스며들기 시작하는 3월 공단노동자들을 만나 2016년 공단 노동자 임금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 경기반월·시화, 인천남동, 대구성서, 울산, 부산녹산, 웅상 등 7개 공단지역이 대상이다.

전국 수많은 공단 중에 우선 '구로공단'에서 활동하는 금속노동자를 만났다. 구로공단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침묵을 깨고 일어난 '구로동맹파업'의 소중한 역사를 품고 있다. 구로공단은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IT산업단지로 육성하며 화려한 아파트형공장들과 패션타운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지역의 풍경은 변했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다.



▲ 금속노조가 용현공단에서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금속노조가 구로공단에서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리찾기사업단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어디서 일하시는 누군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남부지역지회)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이규철입니다. 서울 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서 조직사업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권리 찾기 사업'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나요?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결했나요? 재밌는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서울남부지역지회) 가장 많이 하는 선전이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입니다. 9시 출근인데 8시 반까지 출근해 체조, 청소, 사전작업하는 걸 하지 말자고 선전 했어요. 진짜 회사들이 출근시간을 9시로 바꿨죠. 하지만 선전이 끝나고 몇 달 지나면 출근시간이 당겨지는 요요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로 현장을 바꿨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신고를 했어요. 원래 9시 반 출근인데 회사가 갑자기 출근시간을 9시로 당겼죠. 구로공단에 아침에 와보면 알겠지만 9시와 9시 반은 천지차이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감독관이 회사에 찾아가 출근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또 여섯 개 사업장의 근기법 위반을 찾아내 근로감독을 통해 못 받은 수당을 받아냈습니다.

(바지락) 이번에 진행한 공단 노동자 임금실태조사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서울남부지역지회)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내용으로 전국 7개 공단이 함께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낮고 근로기준법이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임금요구안을 만들고 함께 싸울 방법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지락) 공단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로 어떤 점을 확인했나요?

(서울남부지역지회) 공단에서 최저임금 미만 월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연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너무 깁니다. IT사업장에서는 '연봉 2100만원 받으니까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잔업과 특근이 이어져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락)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최저시급 1만원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어떻게 이 운동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서울남부지역지회) 작년에 서명을 받을 때, 서명하는 노동자 수가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실망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올해 실태조사 하면서 희망임금에 200만원을 쓰는 분도 꽤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작년보다 기대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공단의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울남부지역지회)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작년 실태조사 때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33%로 나왔습니다. 3명중 1명이 맞거나 욕을 먹으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기법 위반 신고가 그런 맥락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여러분의 뺨이 되겠다'고 알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체감하다보면 노동자들의 생각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일터의 주체가 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지락)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서울남부지역지회) 민주노총의 주인은 이 글을 읽는 전국의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함께 바꿉시다.

이주민과 소수자를 지켜줄 사람을 뽑읍시다

국회가 3월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 벌인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였다. 그래도 소리 소문없이 통과될 뻔한 테러방지법의 시커먼 속내가 필리버스터 덕분에 세상에 까발려졌다. 테러방지법 못지않게 속 시커먼 또 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법무부가 2013년 12월20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이런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내용은 테러방지법과 쌍벽을 이룬다. 공익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주민단체들이 2년간 통과를 막아보려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대체법안 발의 등 고군분투했다. 덕분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등에 관리자

동의 없이 영장발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하나가 삭제됐다.

법무부는 애초에 이를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고 했다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낮췄다. 결국 이 조항을 포기했다. 개정안에는 18개 개정사항과 30개 넘는 신설조항이 포함됐다.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관세사법정보, 납세증명서 등 방대한 정보를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막강한 재량권을 누리왔다. 이젠 '국민'의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손쉽게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각종 허가신청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경우" 강제퇴거 당할 수 있게 됐다.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문구가 지천에 널렸다.

이주민들에게 입증자료를 이유로 비자연장거부, 강제퇴거명령을 남발하는 게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특기다. 여권에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지

적하며 여권위조를 이유로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거나, 석박사 대학원 과정에 전액 장학금을 받기로 했는데 외환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비자연장거부를 내리기도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총선이 다가왔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창과 방패가 돼야한다. 그 창과 방패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쓸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가?

이한숙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

내 권리 찾는것은 다른이의 권리도 보호하는 일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가 있다. 장시간 쪼그려 앉아 용접을 하는 일을 한다. 10년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용접을 한 노동자는 어느 순간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회사를 다니며 치료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다. 잠시 휴직 후 치료 받고 복귀했다가 결국 산재신청을 냈다.

의사는 용접을 장시간 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고 병가휴직을 요청했다. 회사는 병가휴직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고 치료에 전념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한통의 서류가 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다는 서류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하니 모두 자격상실

처리가 됐다고 했다. 회사는 병가 휴직 처리 해준다고 말하고 해고를 시켰던 것이다. 그는 고용 보험 공단에 자격 상실 처리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

이 노동자는 정말 어이없고 분했다. 자신은 분명 병가 휴직 요청을 하고 회사는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병가휴직 낸 그날 바로 퇴사 처리한 것이다. 그는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행동에 나섰다. 산재 신청했다고 퇴사 처리하면 누가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했다. 이 노동자는 사무실로 상담 온 후 곧바로 지노위에 찾아갔다.

회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 왜 해고를 시켰으며, 자신은 퇴사한 적도 없

는데 고용보험공단에 자발적 퇴사라고 말했는지 물었다. 회사는 조목조목 문제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당황했는지 답변을 미뤘다. 다음 날 다시 이 노동자가 항의 전화를 하자 회사는 자신들의 실수라며 고용보험 등을 포함해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퇴사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가 승리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혼자 싸웠지만 회사의 처사는 명백히 부당했고 노동자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다. 만약 그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영문도 모른 채 회사를 그만 뒀을 것이다. 회사로부터 퇴사 취소 확답을 받은 후 그 노동자는 우리에게 웃으며 연락했다.

권리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혼자 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개인 권리를 넘어 전체 노동자가 보다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바꿔야 한다.

산재 신청을 했다고 바로 퇴사 처리한 회사에 분노하고 싸운 이 노동자의 행동이 고마운 이유는 앞으로 '산재 처리 = 해고'라는 공식이 이 회사에서 함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진작 알았더라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한 반올림은 삼성이라는 한 사업장을 넘어 반도체·전자산업 전반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제품생산과 기업의 이윤에 떠밀려 노동자의 생명은 뒷전이 된 현실 속에, 반올림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노동자는 28세 여성 파견노동자였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메탄올 중독사고 발생 후 노동부가 감독점검을 나갔던 곳이기엔 더 충격적이다. 노동부는 조사를 나가서 메탄올로 작업물질을 바꿨다는 사업주 말만 듣고 점검을 마쳤고, 후속 점검은 없었다. 원천인 삼성은 메탄올 사고 후에도 하청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메탄올 급성중독, 20대 노동자 실명위기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2월초 20대 청년 4명이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3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공기 중 흡입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다. 20대 노동자가 화학물질 중독으로 하루 아침에 시력을 잃은 사건이 GDP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일어난 것이다.

4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 유해 화학물질 급성 중독으로 실명위기에 빠졌다. 이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월22일 인천남동공단에서 또 메탄올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사고와 같이 이번 사례 또한 대기업(삼성)하청 업체였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업주는 2월 3일 점검이 끝나자 2월11일 다시 메탄올을 사용했다. 결국 28세 여성노동자가 다섯 번째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됐다. 현재 이 노동자는 뇌손상 및 시력이상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

피해 청년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을 만들 때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가공해야 하는데 이때 메탄올을 유화제로 쓴다. 메탄올은 급성 중독 시 시신경 독성과 신체 대사 후 뇌 독성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취급 사용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안전한 에틸알코올(에탄올)을 대체 물질로 쓸 수 있지만 메탄올이 저렴해서(약 3분의 1 가격)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사용해왔다. 이 공정을 맡은 핸드폰 하청업체들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전국 공단지역에 퍼져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노동자에게 필히 알려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터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메틸알코올인지도 모르고 작업했다. 어떤 물질인지 그 정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도 불가능했다. 이 4명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무수한 노동자가 얼마나 오랜기간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없이 이 물질을 다뤘는지 알 수 없다.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많은 제조공장에서 지금도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등을 통해 깨끗하다고 알려진 반도체 사업장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게 됐다. 먹고 살기 위해 하

는 일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 일단 내 작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무엇인가? 작업환경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하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알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혹은, 일했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일터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등 여러 요소에 대해 일하는 당사자가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당한 권리다. 꼭 기억해두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해주세요.

노동자 여러분의 제보·후원을 기다립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황상기씨의 제보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노동인권활동가, 노무사, 의사, 변호사 등이 국내외 연대, 반도체노동자 건강에 대한 자료수집, 언론홍보와 선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보하세요!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이메일 sharps@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남부순환로 2019) 5층 501호 트위터, 페이스북 @sharpsglory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홈페이지 sharps.or.kr 영문 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바지락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원고는
'바지락'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원고 접수 및
edit@labor.org

●무료 구독 신청
각 지역 상담전화로 신청